

# 한국정부의 열린정부파트너십 행동계획

## 1. 도입

최근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소득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등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칸막이가 낮아지고 있고,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관해 개인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참여 의식 역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관간, 정부와 국민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3년 6월, 한국정부는 '정부3.0 비전'을 선포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표하였다. 정부3.0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공급자가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 나가는 국정 운영의 일대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3.0의 추진전략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국정전반에 적용함으로써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투명한 정부는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개방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다. 유능한 정부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칸막이를 없애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이며, 서비스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3.0은 열린정부파트너십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한국정부는 정부3.0을 통해 공공행정 개선, 공공청렴도 향상,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도전과제(grand challenges)를 실천해오고 있다.

## II.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

그 동안 한국정부는 정부3.0을 기반으로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높여왔고,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 ICT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지않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1. 공공서비스 개선

#### ① 국민소통창구 개발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3년 9월 민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성한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여 행정기관 내에 정책토론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는 식품안전, 사교육부담 경감 등과 같이 국민 관심이 큰 주제에 대하여 민간포털 사이트(Daum)과 연계하여 온라인 기획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정책토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토론건수는 '12년 53회에서 '13년 280회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교육·식품·주택·취업·근로·성범죄·안전·교통·복지 등 국민이 관심있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안전 및 교육정책에 관하여는 토론 결과를 정부정책 수립에 반영한 바 있다. 아울러, '14.3월 '국민참여

확대 노력'과 '전자적 정책토론'에 대한 근거 조항을 행정절차법에 신설하여 민·관협치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② 현장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복지·안전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다수의 기관이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에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각종 화학사고 발생으로 불안해하는 산업단지 내에 거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산업단지 6곳에 화학물질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여 8~9개의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14년도에 개소한 남양주의 고용·복지종합센터에서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6개로 분산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③ 온라인포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

민원24(minwon.go.kr)를 기반으로 개인과 관련된 각종 과태료, 미환급금 등 생활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사·사망과 같은 생활민원을 일괄 안내·처리하는 패키지 서비스 또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민원24를 온라인 민원허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앙부처·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정부3.0 정보공개' 코너를 별도로 신설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정보공개포털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도 회원가입, 정보공개 청구, 결과물 출력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호호환성을 높였다.

#### ④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한국정부는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모바일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국립공원 산행정보를 알려주고, 도로파손·신호등 고장 등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집배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민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다.

## 2. 공공청렴도 향상

#### ⑤ 정보공개 강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수많은 정보 중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하였다. 예전에는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기관의 사이트에 일일이 방문해야했다면, 이제는 정보공개포털에 모든 기관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13년까지 총 8만 5천여건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사전에 공개하였다. 아울러 '14년 1월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에 대한 선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임플란트 비용 비교정보, 중고차의 사고 및 정비 내용 등 토털이력정보,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보, 전국 국립공원의 등산로 등급 정보 등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로 선정된 바 있다.

#### ⑥ 부패없는 사회

대한민국은 행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재산 등록·공개·심사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3년 한 해 동안 총 26회에 걸쳐, 2,688명의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였으며, 재산등록의무자 125,456명 중 44,143명을 재산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였다. ‘14년 1월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직 및 원자력발전 분야 공직자를 재산 등록의무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14년 7월 시행 예정이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업체에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 연관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업무연관성이 발견되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13년 한 해 동안 총 291건을 심사하여 이 중 27건의 취업을 제한하였다.

### 3.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 ⑦ 공공데이터포털 활성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13년까지 총 5,007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다.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 한 곳으로 모아 국민들이 단일화된 창구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3년 11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관련한 상담, 법·기술자문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실제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앱 서비스 개발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세먼지 정보, 화장품 성분 정보, 우편택배정보 등 정부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앱 개발자나 벤처기업이 하이닥(Hidoc),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 스마트택배 등이 그 예이다.

아울러, '13년 12월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정부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구성하고, 공공분야 16명, 위촉직(시민단체·언론, 학계, 업계·협회) 16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민·관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 회의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17)'이 의결된 바 있다.

#### ⑧ 시민참여를 통한 감시 확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책과정 참여를 위해 국민서비스의 접점인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과천시에서는 '시민예비준공검사원제'를 실시하여 46명의 검사위원들이 분야별로 연평균 52개 공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예로 수해복구공사가 당초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아 전면 재시공 및 보완시공을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12년 공모를 거쳐 '13년 처음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122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예산 471억원이 투입되었다. 사업선정을 위한 참여예산위원회는 일반시민 2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체육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경로당 내 마을공동체 식당 운영 등과 같이 주민의 요구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재정건전성까지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어내고 있다.

### III. 국가 행동계획 발전과정

한국정부는 열린정부 구현의 일환으로서 정부3.0 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이번 행동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14년 4월에는 '정부3.0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3.0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분야별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3년 10월~12월간 학계·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 자문단과 함께 '민·관협치 제도 개선 및 모델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이번 행동계획에 반영하였다.

맞춤형 서비스 방안 마련을 위해, '13년 11월부터 2달 동안 한국능률협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여 '14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

국민이 원하는 내실있는 정보공개를 위해, '14년 2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위례시민연대, 정보공개위원회 등과 함께 원문정보공개 시스템 개선방안, 정보공개 실태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14년 4월 학계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는 자문단과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행동계획에 반영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3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오픈데이터포럼'을 '13.7월 창립하였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민간의 수요를 파악해왔다. '14.3월부터는 15대 개방 전략분야의 주관부처별로 민간기업·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데이터포럼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시로 정부3.0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이용하여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수요조사 등과 같은 각종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14년 2월 열린정부 정책의 일환인 '2014년도 정부3.0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학계·기업·언론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3.0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

## IV. 향후계획

### 1. 공공서비스 개선

#### ① 민·관협치 강화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의 국민참여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오프라인으로는 전문가토론, 시민배심원제 등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는 SNS, 인터넷 정책토론, 앱 등을 통해 국민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場으로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민관협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전파하고 온라인 정책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2015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신문고(epeople.go.kr) 온라인 토론 시스템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관협치는 정책의 결과물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과정의 일부이므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토론과제·토론참여자 다양화,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에 집중할 계획이다.

#### ②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수요가 높은 핵심서비스를 쏠 국민 생활밀착 서비스(생활안전, 국민



편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아기·엄마, 초·중·고, 대학생·구직자, 어르신), 취약 계층 서비스(장애인, 농어촌주민, 소외계층), 기업지원 맞춤형 서비스(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기업)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책고객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4년에는 민간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자치단체의 맞춤형 서비스 선도과제를 50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홍보해나갈 계획이다. '15년에는 선도과제 50선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추가 수요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 공공청렴도 향상

### ③ 정보공개 고도화

'14년 3월말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정보의 목록과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국민 개인의 청구가 없어도 정보공개포털에 원문을 사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 등 8개 사항은 비공개하고 있다. '15년부터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할 예정으로 연간 1억건 이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14년 4월 중으로 시민단체·전문가·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정보공개 국민 점검단'을 구성하여 기관별 정보공개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4년에는 정보공개질 고도화에 중점을 두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 관심분야는 10대 테마별(건강·복지·식품안전·육아·재정·교육·소비자보호·여가·일자리·주택)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관심도가 높은 4대 분야(일자리·복지·안전·재정정보)를 중심으로 공개된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 ④ 공직자 윤리 강화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행 개선을 위해 '14년에는 취업제한율 9.7%를 목표로 취업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4월중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취업심사 강화방안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며, '15년부터는 매년 취업제한율을 상향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제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주요내용을 안내해주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제도 알리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시행·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14년 하반기부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의 책임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다.

### 3.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 ⑤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14년 4월 개최된 제2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민간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504개의 핵심데이터를 선정하여 우선 개방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민간전문가,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정책에 즉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4년 상반기 중으로 공공·민간분야의 전문가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는 '공공데이터 그랜드 오픈 포럼'을 개최하여 15대 전략 분야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인 '데이터 포럼단'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향후 동 포럼단은 열린정부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창구로

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Naver(지도), Daum(지도), SK Planet(CCTV, 대중교통정보 등), 솔리  
데오시스템(건축정보) 등 민간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지속적  
으로 공유·홍보하여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  
로 장려해나갈 것이다.